

# '14년 1차 경찰공무원시험대비 전범위모의고사

- 일반공채 · 전의경특채 · 101경비단 -

【한 국 사】

응시번호 :

이름 :

1. 선사 시대의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함북 용기 굴포리 서포항과 부산 동삼동에서는 신석기인들이 먹고 버린 조개더미가 발견되었다.
- ② 경기 여주 혼암리와 충남 부여 송국리에서 발견된 덧무늬 토기는 북방 계통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③ 충북 단양 수양개에서는 석기 제작자가 발견되었으며, 고래와 물고기 등을 새긴 조각품이 출토되었다.
- ④ 충남 공주 석장리는 구석기 전기 · 중기 · 후기에 이르는 문화층이 다양하게 출토되어 최대 규모를 이룬다.

2. (가)와 (나) 국가의 시기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라 도읍의 동쪽에 수혈이라는 큰 동굴이 있는데, 10월에 열리는 나라의 큰 행사 때에 굴 속에서 신을 모시고 나와 도읍 동쪽의 강 위쪽에서 제사를 지낸다.  
 (나) 왕의 성은 부여씨이다. ... 나라 안에는 여덟 씨족의 대성(大姓)이 있으니, 사씨 · 연씨 · 해씨 등이다. 그 나라의 왕은 해마다 매 계절의 중간달에 하늘과 오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 ① 4세기 중반 - (가)는 (나)와 황해도 지역을 두고 대결하였다.
- ② 5세기 전반 - (가)는 (나)를 후원하여 낙동강 유역을 공격하였다.
- ③ 5세기 후반 - (나)는 (가)를 공격하여 수도를 함락시켰다.
- ④ 4세기 전반 - (나)는 (가)와 결혼 동맹을 맺어 이웃 나라에 대항하였다.

3. 다음 백제의 정치 발전 과정 중 (가)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나 · 제 동맹 체결 → (가) → 나 · 제 동맹 결렬

- ①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여 공인하였다.
- ② 익산에 미륵사를 건립하고 익산 전도를 계획하였다.
- ③ 중국의 요서 · 산둥, 일본의 규슈 지방에 진출하였다.
- ④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통제를 강화하였다.

4. 다음 중 6세기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 ㉠ 가야가 연맹왕국 단계에서 완전히 멸망하였다.
- ㉡ 신라에서 불교식 왕명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 ㉢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 ㉣ 원효가 아미타 신앙을 통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 ㉤ 신라에서 무덤의 돌레돌에 12지신상을 조각하는 양식이 나타났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 삼국통일 이후 신라에서 있었던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다음 (가)에 들어갈 사실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왕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  
 • 성덕왕은 백성들에게 정전(丁田)을 지급하였다.  
 ↓  
 (가)  
 ↓  
 • 혜공왕이 죽고 상대등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면서 왕위쟁탈전이 치열해졌다.

- ① 사벌주에서 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켰다.
- ② 지방 행정 구역을 9주 5소경 체제로 완비하였다.
- ③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 ④ 김헌창이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 하고 난을 일으켰다.

6. 밑줄 친 '이 국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앞서 가신 다섯 임금의 정치와 교화가 잘 되었거나 잘못된 것을 기록하여 조목별로 아뢰겠습니다. ... 이 국왕이 즉위한 해로부터 8년간 정치와 교화가 깨끗하고 공평하였고, 형벌과 표창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쌍기를 등용하여 과거를 시행한 후로부터 문사(文士)를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이 지나치게 후하였습니니다. 이런 까닭에 제주 없는 자가 부당하게 등용되고, 차례도 없이 벼슬을 뛰어올라 1년이 못 되어도 재상이 되곤 하였습니다.

- ① 국자감을 재정비하고 전문 강좌를 설치하였다.
- ② 관리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복을 제정하였다.
- ③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전시키고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④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7. 몽골과의 항쟁을 시간 순으로 나열했을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 ㉠ 처인성 전투                      ㉡ 박서의 귀주성 전투
- ㉢ 황룡사 9층 목탑 소실                      ㉣ 승화후 은의 국왕 추대

- ① ㉠                      ② ㉡                      ③ ㉢                      ④ ㉣

8.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사는 일찍부터 중국에 가서 구도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 ... 마침내 송, 요, 일본으로부터 4천여 권의 불전을 구하여 잘못되고 빠진 곳을 바로잡아 교장(敎藏)을 출판하였다.

- ① 국청사를 창건하고 고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 ② 삼국 시대 승려들의 전기를 수록한 저술을 남겼다.
- ③ 만덕사에서 참회 수행을 강조하는 법화 신앙을 내세웠다.
- ④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기록한 저술을 남겼다.

9. 다음 건의가 있었던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근래에 전하께서 수신전과 홀양전을 없애시어 관리가 죽으면 그 처자의 생계가 막연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과부는 수절하지 못하고 고아는 효도를 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선왕의 옛 제도를 회복하시어 절의를 지키고 외로운 자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하소서.

- ① 세금과 소작료를 동전으로 납부하는 추세가 확산되었다.
- ②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생활 대책으로 구분전이 지급되었다.
- ③ 관직에서 물러난 관리는 국가에 수조권을 반환하여야 했다.
- ④ 영정법 시행으로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전세가 고정되었다.

10.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인식이 반영된 사실을 <보기>에서 고르면?

신이 또 들으니, 기자 사당에는 제전(祭田; 제사를 지내기 위한 토지)이 있고 단군을 위한 제전은 없기 때문에, 기자에게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제물을 올리지만, 단군에게는 봄 · 가을에만 제사한다 하옵니다. 현재 단군 신위를 기자 사당에 배향하게 되어서 한 방에 함께 계신데, 홀로 단군에게 초하루 · 보름 제물을 올리지 아니한다는 것 또한 미안하지 않을까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단군의 사당을 별도로 세우고, 신위를 남향하도록 하여 제사를 받들면 제사 의식에 합당할까 하옵니다.

- < 보 기 >
- ㉠ 소격서 폐지                      ㉡ 주자가례 보급
  - ㉢ 칠정산 제작                      ㉣ 향약집성방 편찬

- ① ㉠, ㉡                      ② ㉢, ㉣                      ③ ㉡, ㉣                      ④ ㉢, ㉣

11.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가 담당했던 업무는 왕의 명령을 해당 관청이나 관료에게 전달하고, 또 관청이나 관료들이 아뢰는 문서를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 국정(國政)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왕의 자문에 응하는 측근 관료의 기능도 하였다. 왕을 늘 가까이서 모시는 직책이었던만큼 정치적인 부담도 컸지만 대신 혜택도 많았다. 업무 자체의 성격상 늘 긴장해야 했고, 이들에 한 번은 숙직을 해야 했으므로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파김치가 되었지만, 능력을 인정받으면 재신(宰臣)이나 추밀(樞密)이 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당시 관료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였다.

- ① 어사대의 관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 ② 화폐와 곡식의 출납 등 회계도 담당하였다.
- ③ 한림원에서 교서나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다.
- ④ 조선 시대의 승지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2.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한 학자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理)와 기(氣)는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물에 있어 이(理)는 기(氣)의 주재 역할을 하고 기는 이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불리(不離)의 관계에 있다. …… 일물(一物)이 아닌 까닭에 일(-)이면서 이(二)요, 이물(二物)이 아닌 까닭에 이(二)이면서 일(-)이다.

< 보기 >  
 ㉠ 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 『동호문답』, 『격몽요결』 등을 저술하였다.  
 ㉢ '기발이승일도설'을 바탕으로 주기론을 강조하였다.  
 ㉣ 김성일, 유성룡 등 남인 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 신하가 주체가 되어 군주의 기질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13. 다음 조선 시대의 정치사에 관련된 사건을 연대순으로 맞게 배열한 것은?

㉠ 기묘사화                      ㉡ 인조반정  
 ㉢ 남인과 북인의 분당        ㉣ 동인과 서인의 분당  
 ㉤ 중종반정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14. 다음 종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람은 본래 한울의 성품을 가졌으므로 사람이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사람이다.
-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어 중국도 위협하고 우리도 멸망할 수 있으니, 보국안민의 계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①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항일 무장 투쟁에 참여하였다.
- ② 유·불·선의 주요 내용이 교리의 기본 바탕이었다.
- ③ 교단 내의 친일 세력을 축출하고 천도교로 개편하였다.
- ④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는 죄로 교조가 처형되었다.

15.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사회경제적 개혁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유형원은 전황이 발생하자 폐전론을 주장하였고, 환곡 대신 사창 제도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 ② 정약용은 현실적 개혁론인 정전제를 내세우다가 후에는 혁신적 개혁론인 여전론을 강조하였다.
- ③ 이익은 봉당이 선비들의 먹이다툼에서 생겼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비들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④ 양반집안의 서자로 태어난 박지원은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16. 다음과 같은 논의가 제기된 국내외적 배경을 <보기>에서 고르면?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을 스위스와 같은 영세국의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조선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유길준도 강대국이 보장하는 중립론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 보기 >  
 ㉠ 명성황후의 시해와 단발령을 계기로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 러시아의 한반도 침투에 대하여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 갑신정변의 실패로 인해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이 강화되고, 청·일 간에는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  
 ㉣ 일본의 위협 속에서 민씨정권이 붕괴되고 제1차 김홍집 내각이 성립되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17. 다음은 근대 변혁운동 과정에서 주장된 내용들이다. 시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한다.  
 ㉣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재정을 넉넉히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18. 다음 중 시기적으로 세 번째에 있었던 사건은?

㉠ 태형은 감옥 또는 죽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 일본의 국제 및 정체의 변혁과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게 위탁한다.  
 ㉣ 총독부 관제를 바꾸어 현역 군인을 총독에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19. (가)~(다)를 저술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역사는 국혼(國魂)과 국백(國魄)의 기록이다. … 국가는 형(形)이요 역사는 별하지 않는 신(神)이므로 국혼을 보존, 강화하는 투쟁으로 국백을 회복할 수 있다.  
 (나) 역사란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정신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다.  
 (다) 조선 민족의 발전사는 그 과정이 아시아적이라 하더라도 사회구성 내면의 발전 법칙은 동일하다. 조선사에서 역사 발전의 법칙성을 발견해야 하며 민족 생활의 발전사를 보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 ① (가) - 일제의 침략과 국권 회복 투쟁의 역사를 저술하였다.
- ② (나) - 유교의 폐단을 비판하며 유교 구신론을 발표하였다.
- ③ (다) - 한국사도 세계사적 보편성에 따라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 ④ (가), (나) - 역사 연구를 독립 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였다.

20. 다음 발언이 나온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1945.12	1946.3	1946.7	1947.5	1948.8
(가)	(나)	(다)	(라)	
모스크바 3상회의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2차 미소 공동위원회	대한민국 정부수립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14년 1차 경찰공무원시험대비 전범위모의고사

- 일반공채 · 전의경특채 · 101경비단 -

【영 어】

응시번호 :

이름 :

1. 다음 문장의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They have been \_\_\_\_\_ the question for several months.

- ① considering                      ② considering about
- ③ discussing about                ④ thinking

2. 다음 문장의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_\_\_\_\_ reached shelter when the storm broke.

- ① Hardly they                      ② Hardly they had
- ③ Hardly had they                ④ They hardly have

3.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잘못된 것은?

The unit of ①measurement known as a 'foot' ②has originally based on the average ③size of the human ④foot.

4. 다음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Without any previous knowledge of environmental law, Mr. Matthews \_\_\_\_\_ answer a technical question like yours.

- ① can hardly expect              ② cannot hardly be expected to
- ③ can hardly be expected to      ④ cannot hardly expect

5.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I saw a charming girl of perhaps 12 \_\_\_\_\_ the violin on TV

- ① to play                              ② playing
- ③ plays                                ④ to be playing

6. 다음 중 'but' 의 용법이 보기와 같은 것은?

There is nothing to do but to obey.

- ① There is nobody but has his fault.
- ② No one but her would do so.
- ③ She would have failed but that he helped her.
- ④ She heard the news but now.

7.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A: Wasn't it cold yesterday?

B: (응, 춥지 않았어.)

- ① Yes, it wasn't.
- ② No, it wasn't.
- ③ Yes, it was.
- ④ No, it was.

8.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Had daddy told me earlier, I \_\_\_\_\_ a better wife and daughter too.

- ① could have been                ② have been
- ③ would been                      ④ can be

9. 다음 밑줄 친 곳에 알맞은 것은?

Her husband, a plumber's assistant, earns only \$300 a month, which makes it very difficult for her to feed and clothe her children properly, \_\_\_\_\_ send them to school.

- ① much more                        ② still more
- ③ much less                         ④ even less

10.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It is careless \_\_\_\_\_ you to make such a mistake.

- ① of                                    ② for
- ③ as                                   ④ about

11.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은?

The Amazon River, which empties into the Atlantic Ocean, is an awe-inspiring natural wonder. ①It's so wide that one fifth of all the moving fresh water on Earth flows from its mouth. ②In addition to being the widest river in the world, it is one of the longest, being about four thousand miles long. ③Furthermore, the Amazon covers the largest drainage area of any river : 2,772,000 square miles, ④Environmentalists have defeated plans to channel the river by building a series of dams.

12. 주어진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had just taken off for its tenth flight in January 1986 when it exploded in the air and killed all seven people inside.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were watching the liftoff because schoolteacher Christa McAuliffe was on board. McAuliffe, who had been chosen to be the first teacher in space, was planning to broadcast lessons directly to schools from the shuttle's orbit around Earth. This Challenger disaster led NASA to stop all space shuttle missions for nearly three years while they looked for the cause of the explosion and fixed the problem. They soon discovered that the shuttle had a faulty seal on one of the rocket boosters. Unfortunately, the teacher-in-space program was indefinitely put on hold. So were NASA's plans to send musicians, journalists, and artists to space.

- ① Schoolteacher Christa McAuliffe's pioneering participation in the space program
- ② The reason why the American space program was put on hold
- ③ The important of the space research and training of astronauts
- ④ A satire on the unsuccessful or tragic space mission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The nation is experiencing serious outbreaks of measles that look to be a delayed consequence of a failure to vaccinate infants and young children more than a decade ago. A prime cause of that failure was ill-founded fears among parents that a widely used vaccine to combat measles, mumps and rubella might cause autism. Because they shunned the vaccine, their children, now in their teens, are suffering the consequence.

- ① The Experience of Outbreak
- ② The Use of Vaccine
- ③ The Cause of Autism
- ④ The Price of Fear



# '14년 1차 경찰공무원시험대비 전범위모의고사

- 일반공채 · 경찰행정학과특채 · 전의경특채 · 101경비단 -

【형 법】

응시번호 :

이름 :

1. 판례의 입장에서 구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군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자의 최종학력 허위 기재·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재판 전에 개정되어 학력 허위공표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경우
- ㉡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 지정상품에 관한 고시의 변경으로 공업용밀링머신이 지정상품에서 제외된 경우
- ㉢ 건설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규모가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 경우
- ㉣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바닥면적 3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가 개정되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의 '자문에 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된 경우
- ㉥ 도로교통법상의 지정차로제도가 시행 후 폐지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한 실질설(기능설)은 법령계약선행행위·조리 등을 주된 근거로 들며, 형식설(법원설)은 보호의무와 안전의무를 지도적 관점으로 채택한다.
- ㉡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 ㉢ 살인죄와 같은 단순결과범과 사기죄와 같은 행태의존적 결과범을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정형의 동가성(동가치성)은 전자의 경우에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3.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4. 다음 중 甲의 죄책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며, 甲에게는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함)

- 가. 甲은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그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가명과 4살 어린 허위의 출생연도를 기재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다방 업주에게 교부하였다(그 가명을 그 다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 사용함)(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 나. 甲은 이미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의 위조 부분은 논외로 함)를 스캐너로 읽어들이어 이미지화하고, 그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로 하여금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하였다(무죄).
- 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甲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타인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 라. 甲은 乙로부터 乙이 등록한 '○○부동산'의 등록 명의를 빌려 중개행위를 하던 중, 매매계약 중개과정에서 자신을 '○○부동산'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부동산 대표 甲'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다(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법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때에도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 ㉡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의 차이가 없다.
- ㉢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실행에 착수한 경우 행위자가 생각한 대로 결과발생이 없었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구체적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 형법은 과잉방위행위, 과잉피난행위,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견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경우
- ㉡ 긴급명령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해 확립된 규정이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및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
- ㉢ '타인의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는 변리사의 감정결과와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고 발가락 5개의 양말을 제조판매한 경우
- ㉣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라는 민원사무담당 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7. 다음 중 바르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정보기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 자료를 방송사 기자가 입수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도하였다면 정당행위로서 무죄이다.
- ㉡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족하며, 사물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과 같은 심리적 요소의 흠결 혹은 미약을 요하지 아니한다.
- ㉢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후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丙, 丁이 체포된 경우, 甲은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 ㉣ 공동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공동정범의 속성상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 ㉤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 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 ㉡ 형법은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벌금형의 하한은 감경할 수 없다.
- ㉢ 주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지 않더라도 추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지만 공소제기되지 않은 자의 소유에 속하는 범죄행위에 제3자로부터 물건을 몰수할 수 없다.
- ㉤ 수형자 아닌 제3자가 수형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벌금의 일부를 납부하더라도 벌금형의 시효는 중단된다.
- ㉥ 밀수전용의 선박이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선박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그 공부상의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②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③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區)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청장은 구(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구(區)는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수뢰자가 중죄자로부터 10만원 원 자기앞수표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모두 소비한 후 중죄자에게 다른 돈으로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였다면 중죄자로부터 3,000만원을 몰수하여야 한다.

10. 각 사례에서 甲에게 과실범이 성립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 ① 甲은 고속도로를 야간 운행하던 중 갑자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해 뛰어들어 보행자를 치쳐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② 병원 인턴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 환자 A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A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③ 甲은 A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 8m 정도 떨어져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을 골프공으로 맞혀 상해를 입혔다.
- ④ 산부인과 의사 甲은 30대 중반의 초산모 乙에 대해서 제왕절개수술을 하였는데, 乙은 수술 후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등의 증세를 나타내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지만, 甲은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등은 폐색전증의 증상과 징후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호흡곤란이나 현기증 등은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 중의 하나였다.

11. 다음 중 바르지 못한 것은?(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을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근처에 있는 H은행에 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강도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 ②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협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③ 인증받은 사서증서(私署證書)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 ④ 자전거를 인도받은 후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더라도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2. 공무상표시무효죄 및 공용서류무효죄에 관한 설명 중 옳바르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건물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그 가처분 목적물에 부착된 이후 제3자로 하여금 그 건물 중 일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 ②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 ③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고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 ④ 피고인이 판결원본의 일부기재 부분을 청잉크로 그었다면 이로 인하여 판결원본의 해당부분이 손상되어 그 효용이 침해되었다 아니할 수 없어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
- ⑤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한다.(대판 1997.3.11, 96도2801).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든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14. 다음 중 이중양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매매계약 후 대금까지 모두 지급되었는데 농지를 이중매도한 경우, 먼저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었던 경우
- ㉡ 계약금을 받은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중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 ㉣ 규제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하고 대금을 전액 수령한 매도인이 이중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의제기간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형법범규 명확성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금지되는 확장해석·유추해석에 해당된다.
- ②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 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위 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자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려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대기업의 회장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회사 및 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회사 주식매입의 수량·가격·시기를 미리 정하여 매입하게 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된다.
- ④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행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16.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한 신탁자로부터 임야의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사람이 신탁받은 지분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해서 위 임야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甲이 달력의 제작납품주문을 받아오면 乙이 본인의 비용시설로 달력을 제작하고 납품대금 일부를 이익배당금으로 甲이 지불받기로 하였다면 甲이 달력을 납품하고 수령한 약속어음을 임의 처분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은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담보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
- ㉣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와 관련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1개

17.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결과적 가중범은 책임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중한 결과에 대해 적어도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형법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결과적 가중범은 그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일반 과실범의 결과야기에 서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다.
- ④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형태이고,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18.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휴일 또는 야간에 구치소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게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범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업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②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을 없다.
- ③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임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이후 계속하여 자신을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 ④ 형법의 해석상 태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낙태행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에 대한 훼손이나 임산부의 태아 양육·출산 기능의 침해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한다.

19. 다음은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다. 옳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경우,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 ②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 지원자인 乙이 학과장 甲의 도움으로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을 추가 게재하여 심사요건 이상의 전공논문실적을 확보하였다더라도, 이는 乙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연구결과물로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이고 이후 다른 전형절차들을 모두 거쳐 최종 선발된 것이라면, 乙의 행위가 형법 제137조에 정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 ④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검사가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대면조사를 위한 피의자 인치를 2회에 걸쳐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의 죄책을 진다.

20. 미수범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한 공갈죄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미수에 해당된다.
- ②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 ③ 장롱 안에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의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꺾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 ④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배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유리창문을 열려고 하는 중 사람소리가 들려 이를 중단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 '14년 1차 경찰공무원시험대비 전범위모의고사

- 일반공채 · 경찰행정학과특채 · 전의경특채 · 101경비단 -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

이름 :

1. 소극적 진실주의와 직접관계가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  | ㉡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    |
| ㉢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도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 처분한 경우 피고인은 관할이전 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범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범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범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범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범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범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④ 관할범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근상급범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3. 다음 중 판례에 따른 때 무죄추정원칙의 위반을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 없이 국고에 귀속한다는 구 관세법 제215조 중 제181조 부분 |
|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중 ‘또는 일부’ 부분  |
| ㉢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   |
| ㉣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부분   |
| ㉤ 불구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규정  |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변호인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아무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
- ②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경우 이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는 물론 재항고도 할 수 없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다수설 · 판례에 의함)

- |  |
|--|
| ㉠ 형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 ㉡ A죄(2년 이상의 징역)의 공소시효기간은 10년이다   |
| ㉢ 과형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   |
|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의 1인이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 ㉥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 ①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 ②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중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불출석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
- ④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7.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소에 해당한다.          |
| ㉡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도난피해신고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는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범인의 대표자도 이에 포함된다.               |
| ㉣ 고소의 취소를 인정한 이상 고소의 포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공판절차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 ㉡ 재판장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다시 증거조사하여야 한다.      |
| ㉢ 공판절차의 갱신에서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할 필요는 없다.                          |
| ㉣ 공판절차의 갱신에서 피고인신문은 재판장이 한다.                                     |
| ㉤ 집중심리주의, 당사자주의는 판사의 경질이 있으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9.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 검사가 뇌물수수죄로 기소한 후, 공소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사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로 뇌물로 제공된 수표의 발행전표사본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 ㉢ 여관과 같이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언제나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경찰관이 전화사기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은 25년이다.
- ② 포괄1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③ 공소장이 변경되어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본래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④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해야 할 경우에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11.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신청각하결정을 해야 한다.
- ② 상대방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매매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 또는 해제하지 않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금잔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 ③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배상명령신청의 이익이 없다.
- ④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때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나,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12.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피고인은 공소장부분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배심원은 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 ㉣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고지하면 충분하고, 판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3.다음 사례의 비밀녹음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 ㉠ 교사 A가 학생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교사 B가 수업시간에 발언한 내용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
- ㉡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 ㉢ 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 ㉣ 제3자인 사인(私人)이 간통죄 당사자들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4.증거능력 인정요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고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특수상대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 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그 피의자가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5.일부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

- ① 피고인이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므로 상소의 효력은 그 불복범위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 ②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일부 무죄, 일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③ 단순1죄 또는 과형상 1죄의 일부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 판단 할 수 없다.

16.다음 판례 중 틀린 것은?

- ① 누범전과는 기재하여야 하나, 단순한 양형사유인 정상에 관한 사실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
- ②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은 위법이다.
- ③ 중죄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기재는 필요치 않다.
- ④ 적법한 수입신고한 이상 관세포탈죄의 기수나 미수가 될 수 없고 신고의 방법 자체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면 판결이유에 그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17.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② 구급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이는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다.
- ③ 재정신청은 취소할 수 있는데,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18. 다음 중 형식적 소송조건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소가 취소되지 않았을 것</li> <li>㉡ 사면이 없을 것</li> <li>㉢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li> <li>㉣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할 것</li> <li>㉤ 확정 판결이 없을 것</li> <li>㉥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li> <li>㉦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가 없을 것</li> </ul> |
|--|

- ① ㉠㉡㉢      ② ㉡㉢㉤㉥      ③ ㉡㉢㉤㉦      ④ ㉡㉢㉤㉥㉦

19.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14일 이내에 공판절차에 의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 ②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③ 약식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0.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 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③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기각판결, 상고기각판결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④ 항소심에서 파기판결이 확정된 제1심 판결은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14년 1차 경찰공무원시험대비 전범위모의고사

- 일반공채 · 경찰행정학과특채 · 전의경특채 · 101경비단 -

【경찰학개론】

응시번호 :

이름 :

1. 다음 중 경찰의 개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경찰법상의 이른바 일반조항의 존재를 전제로, 경찰관청에 대한 권한의 포괄적 수권과 법치국가적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도구 개념으로서 형성된 것이다.
- ㉡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경찰권의 발동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범위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 조직법적 기준에서 파악된 개념이다.
-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으로 실무상 확립된 개념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내부경찰체인 1896년에 지방경찰규칙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 정부경찰체는 관장범위가 한성 및 각 개항시장의 경찰사무 및 감옥사무로 제한되고, 지방에는 총순을 두어 관찰사를 보좌하도록 하는 등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되었다.
- ㉢ 통감부 설치이후 일본헌법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및 군사경찰의 업무에 관한 지휘권은 통감부에 있었다.
- ㉣ 경찰사무에 관한 취곡서에 의해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경찰행정관청이 참여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무권한의 행위가 되며 무효가 된다.
- ㉡ 경찰관청 행위의 법적효과는 경찰관청의 구성원인 자연인의 변경이나 행정관청의 폐지·변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권한의 위임에서의 위임사항은 위임경찰관청의 권한 중 일반적·포괄적 권한의 일부에 한하며 또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
- ㉣ 대결이란 행정관청이 그 보조기관에 사무처리에 관한 결정을 맡기지만,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는 경우로 법령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 ㉤ 경찰위원회는 경찰관청이 표시할 국가의사를 심의·의결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경찰기관으로 대외적 표시로 국가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다음 내용 중 옳은 설명은?

- ㉠ 경찰법은 통일된 법전이 없이 무수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자체의 특색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 ㉡ 훈령은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 또는 보조기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 ㉢ 수입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 ㉣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에는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강임, 정직 등이 있다.

5. 다음 중 경찰인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나열한 것이다. 설명이 옳바르지 못한 것은 ?

- ㉠ 총경의 휴직·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 ㉡ 총경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은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 경정의 신규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 ㉣ 법령에 의한 위임이 있을시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은 지방경찰청장이 행한다.

6. 다음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 치안총감, 치안정감 및 시보임용기간 중을 제외한 모든 경찰공무원은 법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당하지 않는다.
- ㉡ 직무명령에 형식적 요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복종에 따르는 책임은 수명공무원이 져야 한다.
- ㉢ 성실의 의무는 법령에 의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무이다.
-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권면직의 요건에 해당한다.
- ㉤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는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서 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몇 개인가?

- ㉠ 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 경찰책임의 원칙상 경찰권 발동의 대상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간섭권이라는 자연법적 근거만으로도 발동될 수 있다.
- ㉣ 부당에 의해 부과된 의무불이행으로 부당부 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의무불이행은 부당부 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될 뿐이다.
- ㉤ 경찰학가는 원칙적으로 쌍방적 행위에 속하며, 유효요건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불심검문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불심검문시 피검문자에게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흥기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 불심검문 후 임의동행시 진술거부권까지 고지할 필요는 없다.
- ㉢ 불심검문으로 경찰관서에 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할 수 없다.
- ㉣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구속할 수 있다.

9. 다음 중 경찰예산의 분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준예산이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예산에 해당한다.
-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경찰부서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 ㉢ 품목별예산제도는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증가 또는 감소를 산출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서 전년도의 예산을 활용한다.
- ㉣ 영기준예산제도는 프로그램의 실행과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금년도의 예산과 연결 짓게 만든다.

10. 경찰보안관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 정보상황실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이다.
- ㉢ 보안의 대상에는 인원, 문서, 시설 등이 있다.
- ㉣ 기동대·전경대의 행정부서 근무자는 보직발령과 동시에 II급 비밀취급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한다.

11. 경범죄처벌법과 관련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 ① 공무방해 또는 고의성이 있거나 상습범인자는 훈방할 수 없다.
- ② 경범죄처벌법은 광의의 형법이자 형법의 특별법이다.
- ③ 경범죄에 관하여 선고유예는 가능하나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 ④ 경범죄처벌법은 형사실체법이면서 절차법적 성격도 있다.

11.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몇 개인가?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반드시 그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
- ㉡ 관광특구인 경우에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하는 행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화약류의 폐기, 모의총포의 제조, 화약류의 운반 등은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사항이다.
- ㉤ 경범죄처벌법은 폭행의 예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며, 미수범을 처벌하고, 경범죄처벌법에서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 공제일 후부터 6개월간 습득물을 반환받을 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유실물의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다음은 경비경찰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가 ?

경비경찰은 교통관리 등 교통경찰의 협조는 물론, 정보나 수사 또는 보안 등 다른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경비사건에 대하여 징후를 파악하고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는 역할을 정보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경비수행 과정에서 만약 경찰위반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수사나 보안경찰의 수사활동이 전개된다.

- ① 복합적 활동                      ② 현상유지적 활동
- ③ 대응적 활동                      ④ 질서유지적 활동

14. 다음 중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에 대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위하여 운용되는 우리나라의 대테러 관련 사건대응조직이 아닌 것은 ?

- ① 대테러특공대
- ② 대책본부 및 대책반
- ③ 현장지휘소장·협상팀·지원팀
- ④ 대테러 실무위원회

15. 운전면허의 종류와 구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알맞은 것은 ?

- ① 제1종 면허는 대형·보통·소형면허로 구분
- ② 제2종 면허는 보통·소형·특수·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
- ③ 제1종 면허는 대형·보통·소형·특수면허로 구분
- ④ 제2종 면허는 보통·소형·특수면허로 구분

16. 경찰서 정보과 甲형사는 A대학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총련 대의원 대회 ㉠ 상황속보를 상부에 보고하는 한편, 향후 한총련의 투쟁 방향과 대책 등에 대한 ㉡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정보의 기능별 분류에 의할 때, 연결이 바른 것은 ?

- ① ㉠ - 기본 정보, ㉡ - 현용 정보
- ② ㉠ - 현용 정보, ㉡ - 기본 정보
- ③ ㉠ - 기본 정보, ㉡ - 기획 정보
- ④ ㉠ - 현용 정보, ㉡ - 판단 정보

1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③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최장기 유효기간은 4년이다.
- ④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8.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가입·가입권유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국가보안법의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이다.
- ② 기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행위시 과실로 인하여 반국가단체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
- ④ 행위자의 지위와 관련한 정도에 따라 형벌에 차등을 두고 있다.

19. 피보안관찰자의 최초신고, 정기신고, 수시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 ①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즉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구대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피보안관찰자는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구대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피보안관찰자가 신고를 한 후 거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거소로 이전한 후 7일 이내에 지구대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

- ① 자국민의 경우에는 임의적 불인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한다.
- ③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④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한다.

# '14년 1차 경찰공무원시험대비 전범위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특채 -

【수 사】

응시번호 :

이름 :

- 다음 수사의 기초이론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 ①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FBI는 범죄심리분석관을 통하여 살인사건의 공통점을 추적하였다.' 이러한 범행동기의 파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는 실질적 의의의 수사이다.
  - ② 수사절차는 법적 안정정보다는 합목적성이 강조된다.
  - ③ 범죄수사는 대체로 하강과정을 거쳐 상승과정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나, 이 순서는 반드시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 ④ 범행이 재현되려면 수사요소는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범행재현의 3요소 중 사건의 형태성을 의미한다.
- 수사기관의 보고·지휘 등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 ①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관은 해당 사건 수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결합될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해 체포·긴급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제출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검거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경찰내사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경찰내사처리규칙에 의한다.)
  - ① 내사는 첩보내사, 진정·탄원내사, 일반내사로 구분된다.
  - ②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는 신고내사이다.
  - ③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관은 내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협회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사첩보수집 및 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 ① '범죄첩보'라 함은 대상자, 혐의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내사단서자료와 범죄관련 동향을 말하며, 전자를 범죄내사첩보, 후자를 범죄동향첩보라고 한다.
  - ② 경찰공무원은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서명을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 ④ 수사첩보의 보존기간은 2년이며,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10년이다.
- 변사자검시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때에는 검시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때 검시에 참여한 검시관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할 때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의사의 검시조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영장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사법경찰관은 통보한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여졌거나 사망자

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취지를 해당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신수사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 ①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 및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허가서 표지 사본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수사활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연고감 수사는 평소 관내 우범자 동향 등 기초자료 수집이 중요하다.<br>㉡ 유류품 수사에서는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유류품과 피해자와의 관계, 유류품과 현장과의 관계, 유류품과 범행시와의 관계에 착안점을 둔다.<br>㉢ 장물수사 중 특정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특정범인에 관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일방수사라 한다.<br>㉣ 유류품 수사시에는 기억의 문제, 가능성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 등에 착안점을 둔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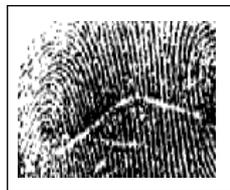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수사서류 중 범죄인지서의 작성순서가 옳게 연결된 것은?

- |  |
|--|
| ㉠ 피의자 인적사항                      ㉡ 범죄경력자료<br>㉢ 범죄사실의 요지                      ㉣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 경위<br>㉤ 죄명 및 적용법조 |
|--|

- ① ㉠→㉡→㉢→㉣→㉤                      ② ㉠→㉡→㉢→㉤→㉣  
 ③ ㉠→㉡→㉣→㉤→㉢                      ④ ㉠→㉣→㉢→㉡→㉤

9. 아래 지문은 공상문, 제상문, 와상문 어느 문형에도 속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지문이다. 분류번호는?



- ① 1                      ② 7                      ③ 0                      ④ 9

10.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생명활동이 정지되므로 시체에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시체현상이라 한다. 시체의 초기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온의 냉각, 시체건조, 각막의 혼탁, 시체열룩, 시체균음은 일반적인 시체의 초기현상이다.
- ② 시체균음 현상은 일반적으로 턱 - 어깨 - 팔·다리 - 손가락·발가락 순으로 진행된다.
- ③ 시체균음 현상은 일반적으로 근육 발달이 양호한 사람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 ④ 시체열룩은 일반적으로 주위의 온도가 낮을수록 빠르게 나타난다.

11.피의자유치 및 호송의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이상의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 ② 형사범과 구류수, 19세 이상의 자와 19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③ 신체검사 중 간이검사는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 ④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2.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 ①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한다.
- ②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 본인이 원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한다.
- ④ 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 )안의 A부터 D까지 숫자의 합은?

제4조(적용범위)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 A )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 B )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 C )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 D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① 48                      ② 50                      ③ 51                      ④ 54

14.다음 중 REID 9단계 신문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수사관이 유죄라고 판단한 용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 사용되는 기법이다.
- ② 감정적 범죄자는 범죄 후 상당한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 ③ 감정적 범죄자에게는 사실적 분석기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 ④ 9단계 신문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용의자의 진술거부권 등 권리포기를 풀어내야 한다.

15.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행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16.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 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상호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3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③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④ 가해이유나 동기가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17.아래 박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마약류는?

- 페닐계 화합물로서 화학명은 2,6-다이아이소프로필페놀(2,6-diisopropylphenol)이며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하얀약’, ‘우유주사’ 라는 별칭이 붙었다.
- 수술시 전신마취의 유도(induction), 유지(maintenance) 또는 인공 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sedation)을 위해 쓰이고, 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에도 사용된다.
- 불면증을 없애고, 피로를 해소할 뿐 아니라 불안감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등 환각을 일으키는 효과도 있어 환각제 대응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 미국에서는 2009년 통제물질로 지정됐지만, 한국이 최초 2011년 2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 의약품에 포함시켜 마약류로 지정하였다.
- 2009년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사망원인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 ① MDMA                      ② 텍스트로메토르판제제
- ③ 펜사이크리딘(Phencyclidine)                      ④ 프로포폴(Propofol)

18.방문판매업자가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것은?

- ①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 ②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 ③ 배달업자에게 배달에 필요한 정보이외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
- ④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청구 하는 행위

19.다음 중 환경범죄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자연적 재해성
- ㉡ 침해의 직접성
- ㉢ 침해의 신속성
- ㉣ 원인 및 정도의 불명확성
- ㉤ 침해의 비상규성
- ㉥ 침해 주체의 불명확성
- ㉦ 침해의 전파성·복합성·경합성
- ㉧ 힘의 불균형성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0.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민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벌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 3천만원 이상 국제·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

- ① ㉠,㉡,㉢                      ② ㉠,㉢,㉣
- ③ ㉠,㉡,㉢,㉣                      ④ ㉠,㉢,㉣,㉤

# '14년 1차 경찰공무원시험대비 전범위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특채 -

【경찰행정법】

응시번호 :

이름 :

1.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실정법상 특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모두 강학상의 특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② 특허에 의해 설정되는 권리는 언제나 공권이다.
- ③ 특허는 상대방에게 특별히 권리, 능력 등을 설정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한다.
- ④ 특허의 효과는 일신적속적인 것이 아닌 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으나, 양도시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다.

2. 존속력에 관해 틀린 설명은?(다수설에 따름)

- ①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처분 행정청은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라도 직권취소 할 수 있다.
- ② 불가변력은 행정청이 하는 모든 행위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한 취소나 철회가 제한되지 않고 허용된다.
- ④ 불가변력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3.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② 법원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확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내용은?

- ①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의 경우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5년 임기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용된 원고를 직권면직할 처분은 의무를 과하거나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 ③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
- ④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5. 행정법상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처분에 불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판례에 의하면 부담이 아닌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은 부인된다.
- ③ 강학상의 인가의 경우에도 판례상 부관의 부가가 문제되지 않는다.
- ④ 사정변경으로 인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6. 수용유사침해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법한 행정작용의 비정형적·비의도적인 침해에 대한 보상제도이다.
- ②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여, 민법상의 소유권은 물론 무체재산권 그 밖의 공·사법상의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 ③ 위법·무책인 경우의 손해전보를 위해 창안된 이론이다.
- ④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갈채취사건에서 수용유사침해법리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를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다.

7.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된다.
- ③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권한있는 기관이 취소변경할 수 있다.
- ④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는 처분청도 직권취소나 철회를 할 수 없게 된다.

8. 일반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행정행위의 법적 규율성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행위와 행정입법의 구별기준이 된다.
- ② 이 개별성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발령당시의 시점에 있어서의 인적 범위의 특정 여부이다.
- ③ 집회허가의 경우 행정행위로 인정된다.
- ④ 다수설은 개별공시지가를 물적 행정행위로 보나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성을 부정한다.

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부담으로 상대방에게 영업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명한 경우,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있으면 허가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 ②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행정청은 언제나 자유로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해제조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의 이행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 ④ 부담부 행정행위는 정지조건부 행정행위와 달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0. 행정계획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서 부적당한 것은?

- ①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 그 절차와 별도로 구 도시계획법제12조 등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도시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구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초조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그 도시계획결정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는 데에는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 ④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도시계획이 중복되어 결정·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도시계획은 후행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 다음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수산제조업 신고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사인의 공법행위 중 당해 행위 자체만으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자족적 공법행위에는 투표행위, 신고, 합동행위 등이 있다.
- ③ 통상적 의미에 있어서의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일방적 통고행위로서 그 것이 행정청에 제출된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 ④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요건인 경우에 사인의 공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다.

1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서 틀린 것은?

- ①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공유수면매립공허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 처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③ 사정변경에 의하여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부관을 붙인 사안에서, 위 부관의 의미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기간 만료시 그에 관한 개간비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공익적 요구에 의하여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이 철회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 ④ 판례는 과세처분을 행정청이 취소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다시 취소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4.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자있는 행위가 보정행위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하자 없는 유효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치유될 수 있는 행위는 형식 또는 내용상의 하자이다.
- ③ 행정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보호,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고려 등의 관점에서 인정된다.
- ④ 주로 취소 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15. 행정행위의 하자과 행정쟁송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 ①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위법인 경우만을 의미한다.
- ② 행정소송에서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와 취소사유인 경우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하에서는 행정심판의 경우에 관하여 차이가 없다.
- ③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 행정쟁송의 이익유무를 불문하고 언제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무효확인소송의 경우는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6. 당사자소송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에서 당사소송에 관하여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③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대해서도 동법 제25조의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④ 당사자소송의 판결에는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판결의 기속력과 제3자효가 인정된다.

17. 단계적 행정결정과 확약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결정의 경우 기초사실이 변경되어도 원칙적으로 효력에 영향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②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는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결정을 하였다면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그 사전결정에 기속되어 승인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부지사전승인처분 후에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처분이 있었다면 사전적, 부분건설허가로서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8. 다음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석허가 기준에 관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고 경과규정에서 그 적용범위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채석허가기준이 적용될 법령은 개정법령이다
- ②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등 적법한 조치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③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설정특허는 공법상 특허로서 그 갱신여부는 특허관청의 재량에 해당한다
- ④ 광업법상 광업법이 설정된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의 중복설정이 가능하다.

19.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법상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 ② 판례는 내용적으로 법률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근거로 행정규칙 중에서 재량준칙, 규범구체화적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다.
- ③ 헌법재판소는 재량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면,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 ④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정규칙에 위반한 처분을 행하여도 그 처분은 행정규칙위반으로서 직접 위법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 판단여지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법률의 구성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도 이 개념은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나 법원에 의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② 판단여지는 행정행위 효과의 결정과 선택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 ③ 판례는 판단여지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④ 판단여지를 재량과 구별하는 견해는 전통적인 재량개념이 행위결과 측면에서만 재량을 파악하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